

# 통합특별시장에 공공주택·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권한

###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행정기구 '서울시급' 지위 4년간 조직 자율운영 특례, 출범초 행정수요 대응력 강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 구성...의회사무처장 1급으로 격상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공주택지구와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직접 행사하고, 주요 간부 직급이 상향되는 등 사실상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 위상과 자치권을 갖추게 됐다. 통합특별시장에게는 도시개발과 투자 유치 분야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고, 출범 초기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운영 특례도 부여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례를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단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조직과 권한, 재정 운영 기반을 대폭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비롯해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한 30개 시행령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되는 권한 확대다.

시행령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주택지구 지

정·변경·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권한 일부가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것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별법에 새로 도입된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된다.

투자진흥지구는 대규모 투자 유치와 산업 집적화를 촉진하기 위한 특화구역이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가운데 국가나 지방정부,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시행자가 전체 토지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반대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후 10년 이내 투자가 완료되지 않거나, 사업 부진으로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이 직접 해제할 수 있다. 투자 유치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체계가 구축되는 셈이다.

통합특별시의 행정 위상도 대폭 높아진다.

정책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 담당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규정됐다. 광역자치체의 핵심 정책을 총괄하는 직위가 국가직으로 운영되면 중앙정부와의 정책 조정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된다. 대형 재난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재난안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의회의 위상도 높아진다. 통합 이후 확대되는 의정 수요를 고려해 의회사무처장은 1급 지방공무원으로 상향됐고, 복수의 의회사무처장을 4년간 한시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소방 조직의 경우 소방본부

장을 소방정감으로 격상해 통합특별시 규모에 걸맞은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국가공무원 정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부시장과 기획 담당 실장 등 통합특별시에 배치되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통합특별시장과 정무부시장,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연봉과 직급보조비도 높아진 직급에 맞춰 조정된다.

출범 초기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됐다.

통합특별시는 향후 4년간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1% 범위의 자율권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라 조직 신설이나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가 행정사무 처리와 관련한 기관장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방자치법과 소방청 소관 21개 시행령을 개정해 새로운 지방정부 유형인 '통합특별시'를 법령 체계에 반영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정비로 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은 대한민국 다극체제 형성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들이 지역 민생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5국 3특 산업현장 점검일환으로 해남 솔라시도를 방문. 전영대에서 관계자로부터 데이터센터 부지와 태양광 발전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재정경제부

## 구윤철 "녹색 전환에 10년간 재정투자 대폭 확대"

### 5국 3특 해남 방문 첫발...데이터센터 부지·태양광발전단지 점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향후 10년간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 세계 인프라, 녹색·전환금융과 더불어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전환(GX)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도시인 전남 해남 솔라시도를 찾아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약체' 간담회를 열고 "재정, 세제, 금융 및 제도적 지원을 담은 '한국형 녹색전환(K-CX) 전략'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녹색전환이 부담이 아닌 산업 경쟁력의 기회가 되도록 신성장동력이 되는 녹색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개인·기업·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모두

의 녹색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재생 에너지 인프라 등을 활용해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차세대 초고효율 태양광 기술 확보·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초격차 연구개발(R&D)으로 2030년까지 초고효율(35%) 텀셀 양산과 함께 산·학·연 협력을 통해 페로브스카이트 원천기술 확보 및 건물·웨어러블·모빌리티 분야 세계 최초 상용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도심형(건물일체형 태양광)·수송형·수상형·영농형 등 적용 공간 확장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속하는 등 사용처를 다각화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방문한 해남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전환 첨단 기술의 전초기지이자 최전선"이라며 "특히 이곳 솔라시도가 첨단산업·재생에너지·관광 등 미래 산업과 친환경 성장을 선도할 대한민국의 대표 신성장 거점"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해남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Pick) 양광과 같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1등 첨단기술과 제품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솔라시도 인근에 조성될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와 신산업 단지를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녹색 기술 융합지로 키워 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두산에너지빌리터, SK 이노베이션 E&S, 한화솔루션, BS산업,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탑솔라, 다스코, 유일, 한국전력공사, 대한조선, 케이씨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솔라시도의 데이터센터 부지와 태양광 발전단지 등을 둘러봤다.

구 부총리는 이날 해남 솔라시도를 시작으로 '5국3특' 전 지역을 찾아가며 "픽앤백(Pick & Back) 현장 방문을 이어나간다.

각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Pick)한 뒤 민관협약체에서 심도있는 논의의 통해 체계적 지원(Back)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토공간 대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규제완화, 세제, 재정·금융 패키지 지원을 전폭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글로벌 현안 논의 개발원조 파트너십·AI 비전 등 제안...트럼프와 만남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유럽 순방의 마지막 순서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틀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이번 G7 회의에서 확대회담과 환영 행사 등 일정을 소화한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및 초청국 정상들과의 기념 촬영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 이 대통령은 올해 G7 정상회의의 첫 세션인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 연대 재건'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공여국들의 공적 재원에 개발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 G7 등 공여국과 수원국 간에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수원국이 공적 자원을 활용해 자국 내 민간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 자립을 유도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한국 정부의

지원 노력을 소개한다.

아울러 각국의 기술 격차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반사회 구축과 글로벌 AI 허브 등 한국 정부의 AI 관련 비전도 공유할 방침이다.

이번 G7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를 계기로 양자 회담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 진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광주시 산하기관장, 시장과 임기 맞추나

### 강기정 시장 "후임자 인선까지 직무수행...공백 예방" 당선인 인수위 "임기 종료가 원칙...직무대행은 가능"

다음달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퇴임하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임기가 일치하는 광주시 산하기관의 기관장 등에 대한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산하 공사·공단 4곳, 출자·출연기관 15곳 등 19곳 중 11곳의 기관장과 이사, 감사 등의 임기는 강 시장의 임기 만료일인 오는 30일 종료된다. 임기가 만료되는 이들 기관장의 임기는 2023년 4월 제정된 '광주시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에 따라 강 시장과 일치하도록 돼 있다.

강 시장의 민선 8기에서는 단체장이 바뀌어 때마다 일어났던 산하 기관장과의 인사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시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해당 기관은 광주테크노파크, 문화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생생일자리재단, 디자인진흥원, 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여성가족재단, 기후에너지진흥원, 글로벌광주방송,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11곳이다.

이들 기관의 기관장과 이사, 감사

등 90여명은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강 시장과 임기를 함께 해야 한다.

다만, 광주시는 업무 공백 등을 이유로 후임자 선임 시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책으로 뒀다. 하지만 임기를 연장하더라도 새로운 단체장이 들어서면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하다.

강 시장은 이에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공무원 강제교류설과 산하기관장 일괄사표 압박 움직임에 대해 공직자들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인사 보장 원칙을 믿고 통합에 찬성할 만큼, 약속은 꼭 지켜져야 불신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8일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기관장에게 알릴 예정이다.

그러나 민행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수위원회에서는 직무를 연장하지 않고 임기를 마치는 게 원칙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관장이 없더라도 직무 대행 체제 등으로 직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마무리하는 게 원칙이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초대 통합시의회 의장단·상임위 배분 촉각

▶1면에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단순히 의장 1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부의장을 포함한 의장단 구성과 함께 11개 상임위원회의 배분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원 수 비율을 고려해 상임위원장 11석 가운데 전남이 7석, 광주가 4석을 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전체 의원 구성에서 전남권이 다수(63명)를 차지하고 있는 점

이 반영된 결과다.

상임위원회도 지역별 특성이 고려될 전망이다. 광주는 미래산업위원회, 일자리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등을 맡고, 전남은 농수산위원회와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등 지역 산업 기반과 연계된 상임위를 맡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의장 선거 역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포함한 전체 원구성 협상 속

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남과 광주 간 균형, 선수와 경력, 지역 안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초대 통합특별시의회의는 연간 20조원 이상 규모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통합특별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 이후 첫 회의의 운영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초대 의장의 상징성과 정치적 무게감이 남다르다는 평가다.

의장단 선거는 7월 1일 제1회 임시회에 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후보자 등록

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며, 재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득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자를 가린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전남은 송형근·전경선 의원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된 상태이고 광주도 별도 후보군이 움직이고 있어 아직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의장 선거뿐 아니라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함께 논의되고 있어 원구성 협상이 막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